

‘과정으로서 정의로운 전환’ 개시를 위한 노동정책 및 노동조합 과제

이창근 |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사관계적 함의를 통해 본 정의로운 전환

- 첫째, 기술적 낙관주의와 시장의 힘에 기반을 둔 '정의로운 전환' 접근, '합의된 해결책 접근법'(shared solution approach), 대표적 '합의된 해결책'은 녹색성장(green growth), 영국 노동조합
- 둘째, 노동시장에 차별화된 영향, 차별화된 전환비용 부담, '차별화된 책임 접근법'(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pproach), 정부와 사용자 책임 중요, 재교육 등 노동시장 전환 지원, 독일 노동조합
- 셋째, '사회-생태적 접근법'(socio-ecological pattern) 또는 '사회운동 담론'(social movement discourse), 자본주의 체제와 환경적 지속가능성 본질적 양립 불가능,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 연대경제, 돌봄 및 비시장적 노동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전략

- 첫째, '반대', '위험회피', '지지' 전략 등 세 가지 유형. 다만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기 보다, '전략들의 연속체'로 이해할 필요. '반대'와 '지지'는 별로 없고, 대부분 '위험 회피'
- 둘째, '위험 회피'가 많은 것은, 노동조합이 딜레마를 다뤄왔던 경로 의존성과 관련 많음. '고용-임금', '(핵심)고용-유연화' vs '고용-환경'. '위험 회피' 전략이 현실에서는 고용 우선으로 나타날 가능성 농후.
- 셋째, 노조 대응전략 주요 결정 요인은 산업적 이해(sectoral interests), 노조 정체성(union identities) 노조 민주주의(union democracy). 핵심요인은 산업적 이해, 보조적으로 노조 정체성과 노조민주주의.

정의로운 전환의 구조적 제약

- 첫째,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별교섭체제, 노동배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노동 체제는 정의로운 전환의 구조적 제약.
- 둘째, 비정규직, 작은사업장, 플랫폼 노동 등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기후불평등 중첩되어 나타날 가능성 농후. 과거 구조조정 대응 사례 교훈. 기업별 교섭체제는 ‘노사담합에 따른 국가규제 최소화 요구’ 가능성 상존, 노동배제는 국가단위부터 작업장 단위까지. 보령1,2호기 폐쇄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 셋째, 결국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개혁은 정의로운 전환의 필수적 조건. 특히 기업별 교섭 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체시키는 ‘구조적 지체 요인’으로 작용할 것

노동정책 과제

구분	내용
승인적 정의	기후위기 대응정책 결과로 사회의 일부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영향받을 수 있는 개인들과 집단들을 발견.구분 → 비정규직.작은사업장.플랫폼 등 불안정.취약노동자가 기후위기 대응정책 결과에 의해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 사회적 인정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인정도 중요.
분배적 정의	기후위기의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 사이의 불일치, 그로 인한 책임의 분배문제와 기후위기 영향.대응능력에 불평등 해소, 국민 기후일자리 등 국가 책임 등
절차적 정의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검토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에 대한 권리 → 단체교섭권 확장, 초기기업교섭 촉진, 작업장 수준의 녹색단협, 기후위기 관련 사회적대화 전면 재편
생산적 정의	환경적 위험이 생산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및 민주적 절차 보장,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위험 제품 생산 거부’ 등 생산에 대한 노동자 결정권리 인정. 노동안전 관련 ‘작업중지권’의 확대, 단체교섭 의제 확대 등

노동조합 과제

- 첫째, '고용-환경' 딜레마를 과거 '고용-임금', '고용-유연화' 딜레마를 해결하던 방식으로 회귀하지 않기 위한 조건들을 지금부터 마련하는 것 중요. 구조적으로는 초기업교섭, 노조민주주의 강화, 조합원 교육훈련, 지역사회 및 전국단위 사회운동과의 일상적 연대.
- 둘째, 기업별교섭은 핵심적 지체요인. 제도화 요구와 더불어, 노동조합 내부적인 준비 필요.
- 셋째, 작업장 수준의 실천 중요. 녹색단협, 에너지절감+대체에너지이용 확대 등.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

설문조사 개요

조사 명칭	기후위기와 노동 민주노총 조합원 설문조사
조사 시기	2021년 9월 1일 ~ 9월 29일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서베이몽키 이용)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사업장 규모	공공부문		255	30.2
	민간부문 300인 이상		295	34.9
	민간부문 300인 미만		264	31.2
성별	여성		279	33.0
	남성		561	66.4
	그 외의 성		5	0.6
연령	20대		38	4.5
	30대		193	22.8
	40대		355	42.0
	50대		240	28.4
	60대		19	2.2
고용형태	정규직		616	72.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106	12.5
		기간제	35	4.1
		시간제	16	1.9
		파견/용역/하청	46	5.4
		특수고용	20	2.4
		일용직	6	0.7

주요 특징(1)

- 첫째,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자들의 '추상적.직관적 체감'은 높으나, 실업, 전기요금 인상 등 직장과 일상 삶의 문제로까지 연결시키는 '구체적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 둘째, 일자리에 대한 기후위기 영향에 대해서는 일견 상충되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발견. '현재 위험' vs '미래위험', 직접 피해 없지만 피해우려 가장 높아. 또한, 현재 피해는 10명 중 6명
- 셋째, 기후위기 근본 원인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장 중심성'을 꼽은 노동자 비중이 65%로 압도적. 규범적 동의 가능성 커.
- 넷째, 과거 구조조정 대응 사례와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정규직 조합원 중심의 대응으로 인해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불안정.취약노동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포괄하지 못한 한계 지적 가장 많음

주요 특징(2)

- 다섯째, 정부 기후정책 부정적 평가 우세. 동시에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적절' 평가도 거의 10명 중 3명(28.2%) 동의. 노동조합의 대안적 인식과 실천의 중요성 시사.
- 여섯째, 정책과제 중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이 가장 높은 동의. 노동조합 중심 집단적 대응 중요성 인식 반영 + 조직 노동자로서 '원칙적이고 규범적인 동의' ← 기후위기 대응 주체로서 노동조합 중요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 '노동조합 밖 주체'들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
- 일곱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인식 차이는 상당히 큼. 비정규직은 '피해 최소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규직은 '결사의 자유 보장'에 대한 동의가 상대적으로 높음
- 여덟째, 노동조합이 주력해야 할 정책 관련하여, '작업장 에너지 이용 절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작업장 차원의 실천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시사

<끝>

감사합니다.

